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4. 2. 6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순서

I. 평가 개요	1
II. 기관별 종합 평가	3
III. 부문별 평가결과	5
1. 주요정책	6
2. 규제혁신	22
3. 정부혁신	28
4. 정책소통	34
5. 적극행정(가점)	39
IV. 후속조치 계획	44

I.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45개(장관급 24, 차관급 21)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

□ 평가부문·방법

- (평가부문)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
 - *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3점)를 가점으로 합산
- (평가방법) 부문별 평가주관기관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상 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평가 및 일반국민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병행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주관	평가단	일반국민
주요정책	50	159개 주요정책과제 추진성과 등	국조실	100명	7,000명
규제혁신	20	규제혁신 성과·체감도 등	국조실	17명	2,287명
정부혁신	10	기관의 혁신역량 및 성과, 체감도 등	행안부	18명	19,598명
정책소통	20	정책소통 활동 및 성과, 체감도 등	문체부	77명	7,000명
적극행정 (가점)	3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성과, 체감도 등	인사처 국조실	10명	1,732명

□ 추진경과

- ('23.4월) '23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 ('23.4월) '23년도 평가 세부지침 수립,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
- ('23.10월) '23년도 평가대상 기관 설명회
- ('23.12월) 부문별* 평가 시행
 - *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가점)

Ⅱ. 기관별 종합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부문별 평가 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각 기관의 국정성과 제고 독려

□ 평가방법

-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적극행정(가점 3점) 점수를 합산

2 평가 등급

□ 장관급 기관

-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

*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

□ 차관급 기관

-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규제 개선 ▲정부 효율성을 제고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

*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완화(국세청) ▲불법 외국어선 강력단속(해경청) ▲디지털 관세규제, AI·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 신재생에너지 산림규제 개선(식약처·관세청·산림청) ▲공무원 성과중심 평가·보상(인사처)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B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건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Ⅲ. 부문별 평가결과

1. 주요정책 (50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45개 중앙행정기관이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23년에 역점 추진한 기관별 주요정책 과제*의 이행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

* '23년 총 159개 주요정책과제 선정·평가(장관급 기관 3~5개, 차관급 기관 2~3개)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건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과제별로 ①정책효과에 대한 정성평가, ②이행노력·목표달성도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③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 도출
 - (정성평가)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10개 분과, 100명)이 평가
 - (정량평가) 기관별로 제시한 계획이행, 목표달성 정도에 대해 평가
 - (만족도) 일반국민 7,000명 대상으로 과제별 정책 만족도 조사
- 기관별 청년정책, 갈등관리, 지시사항 이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가감점 도출

□ 평가지표

○ 이행노력(25%), 목표달성도(25%), 정책효과(40%), 국민만족도(10%)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이행을 위한 투입노력, 절차·시한 준수 등 - 과제별 이행계획 완수 여부, 부처 간 협업 노력을 포함한 기관의 성과창출 노력 	정량/ 정성	25%
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설정된 목표치 달성여부 - 성과지표로 표시된 목표치 또는 완수해야 할 세부목표 달성 여부, 목표 달성의 질 등 	정량/ 정성	25%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효과 -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효과 등 	정성	40%
국민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소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전문리서치 기관 조사) 	정성	10%

○ 청년정책, 갈등관리, 지시사항 이행 평가 (가감점 1점씩 반영)

* 기관별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참여·소통 확대 성과 ▲적극적·선제적 갈등관리 노력, 갈등 해소·완화 성과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 수립의 충실성, 집행 이행도 등에 대해 평가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복지부, 환경부, 공정위	인사처, 국세청,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해경청
B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건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법제처,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질병청, 기상청
C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방통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23년도 주요 성과

❖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민생안정에 주력

-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물가·실업률 등 거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화 및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국가신인도 유지
- 15개 첨단국가산단 지정 등으로 미래전략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규제·형벌 개선 등을 통해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로 체질전환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취약계층 부담 경감으로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농·어촌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GB 유연화 등으로 균형발전 내실화

❖ 약자복지와 필수·공공 의료체계 강화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역대 최고 생계급여 및 공공의료 전달체계 정비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으로 연금개혁 초석 마련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화학물질의 합리적 관리(화평법·화관법 개정),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불안 해소
- 노조 회계공시제도 시행, 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 및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 등으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과 취약계층 근로권익 보호
- 글로벌대학 지정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경쟁력 제고, 유보통합 추진체계 및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으로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범죄 및 재난·사고 대응 강화, 지방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경주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지원**

- 민생침해 및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소방 현장 대응력 제고 등으로 재난·사고 대비 강화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지방재정 지속가능 방안 마련, 성과중심 평가·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정부 효율성 제고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가명정보 활용 확산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지원

❖ **양·다자 외교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확립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노력 강화와 함께 우수한 방산수출 성과 창출**

- 활발한 정상외교로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복원, 아프리카·태평양 도서국 등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하여 글로벌 국가위상 제고
- '워싱턴선언' 채택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첨단전력 확충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
-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를 다변화하여 우수한 방산수출 성과 달성,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추진 기반 마련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시장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에 총력 경주
-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늘봄학교 등의 효과성 제고 노력 지속
- 정부 디지털서비스의 신뢰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및 처벌규정 강화
-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차질없는 방산수출을 위해 국내 수주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 제도 정비

4 분야별 평가결과

경제 분야

- ❖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 ❖ 첨단산업 육성, 경제체질 강화 노력을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
-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에 주력

주요 정책성과

- 글로벌 복합위기에 적극 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및 대외신인도 유지
 -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여 주요국 대비 물가 안정과 역대 최저 수준 실업률 견인 등 건조한 거시지표* 시현
 - * ▲ '23년 주요국 물가(%) : (韓) 3.6 (美) 4.1 (英) 6.8 (佛) 4.9 (獨) 5.9
 - ▲ '23년 고용률(15세 이상 62.6%, 15~64세 69.2%), 실업률(2.7%)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최저
 - 국가채무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건전재정기조 확립, 국내 외환시장 개방 확대 및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국가신인도** 유지
 - * '23~'27 국가재정운영계획 : 국가채무비율 '25년 70% 전망 → '27년까지 53% 수준으로 억제
 - ** 주요국 신용등급(S&P) : (AA+) 美 (AA) 韓, 佛, 英 (A+) 日, 中 (BBB) 伊 등
- 첨단전략산업 육성, 민간주도 경제체질 개선 등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 15개 첨단국가산단 지정('23.3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지원체계 구축*,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 * 「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 제정, 전략로드맵 수립, 미·일 등과 기술동맹 체제 공고화 등
 -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규모가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23.10월), '역대 3위 수출액(6,327억불)' 달성
 - *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23.6월), 美 반도체장비 대중 수출통제 유예('23.10월)
 - 과도한 경제규제·형벌 개선, 대기업집단 시책 정비*, 기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로 체질 전환
 - * 공시제도 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부당성 판단 등 법 적용 기준 명확화
 - ** 법인세 인하, 가업승계제도 개편 등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통해 민생안정 주력**
 - 과도한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 민간건설 사업여건 개선을 통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으로 주택시장 연착륙 및 내집마련 기회 확대
 - *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규제 폐지 ▲청약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개선 ▲뉴홈 사전청약 확대(0.7→1만호) ▲신규택지 조기지정(8만호)
 - 세제지원 등을 통한 체감물가 중점 관리*, 취약계층 주거·에너지 부담 경감**, 소상공인 손실보상(21.8만개, 4.7천억원) 등 민생안정 정책 시행
 - * ▲유류세·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긴급할당관세 확대 ▲밀가루 출하가격 동결·인하 등
 - ** ▲주거급여·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특례보증자리론 공급(43조원)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 증진 및 민생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제고**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23.10월), 기술탈취 방지대책 및 조달규제 개선*, 가맹·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등으로 중기·소상공인 권익 증진
 - * 시간·비용·서류부담 완화, 혁신기술 개발·확산 유도 등 관련 206개 규제 발굴 → 171개 개선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스마트폰 중간요금제 확대*, 홈택스·연말정산 편의성 제고 등으로 생활 속 국민불편 적극 해소
 - * 30GB/110GB로 양극화되어 있던 5G 요금제의 중간구간(30~110GB) 세분화

- **농·어촌 및 연안지역 활력 증진,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로 균형발전 지원**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23.11월), 「스마트농업법*」('23.7월)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23.3월) 제정 등을 통해 농촌 성장환경 조성
 - *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자격제도 도입,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규정
 - ** 농촌 난개발·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계획 수립 등 규정
 -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권역별 항만 맞춤형 재개발**로 민간투자 견인(약2조원 유치), 부산항 북항 및 인천항 내항개방으로 연안지역 활력 제고
 - * 어촌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자하여 생활·경제 여건 개선 추진('23년 사업 대상지 65개 선정)
 - ** 관광레저(영종도), 에너지허브·신산업(광양), 주택난해소(거제) 등
 -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23.10월), 비수도권 그린벨트 유연화** 등을 통해 균형발전 내실화 도모
 - * 복합혁신구역 조성을 위한 개발절차, 기업 지원방안, 인센티브 및 특례 등 규정
 - ** 지자체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30만㎡이하 → 100만㎡ 미만)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도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물가·금리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지속

☞ 물가 안정과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적극 노력

□ 다양한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철저

-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PF시장 불안 등 다양한 금융시장 리스크 상존

☞ 주요 경제주체별 부채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위기대응체계 정비 등 선제적 조치 필요

□ 연구개발의 질적 혁신 도모

- 정부 R&D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세계 5위 수준)되고 있으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은 정체*

* 피인용 상위 1% 논문('12년 15위 → '21년 14위), 미국 대비 기술수준('12년 77.8% → '20년 80.1%)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유망기술 관련 R&D를 강화하고, 글로벌 선도인재 양성 및 기술선진국과의 협력 확대 등 정책적 노력 배가

□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

- 다양한 지역 활력 증진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및 주민 고령화 심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 우려 지속

* 최근 10년간 농·어가 인구변화('13년대비 '22년) : 농가(285→217만명), 어가(15→9만명)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22년, %) : 국내 전체(18.0%), 농가(49.8%), 어가(44.2%)

☞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기회 창출을 위해 「농지법」 및 「어촌·어항법」 등의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주도형 맞춤형 공간재생 적극 지원

사회 분야

- ❖ 약자복지를 두텁게 하고, 필수·공공 의료체계 강화 도모
-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 ❖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수산물 안전관리 등을 통해 국민불안 해소

주요 정책성과

-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및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기반 마련
 - 2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6.09%), 역대 최고 생계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노인 등 정책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정부 73개 복지사업 기준, ('22년) 512만원 → ('23년) 540만원 → ('24년) 573만원
 - **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23년 月40→ '24년 月50만원),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88.3만개)
 - 과학적 재정추계와 폭넓은 의견수렴에 기반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23.10월), 연금개혁의 초석 마련
 -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확대(12→36개월),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감액 폐지 등
- 필수·공공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기반 정비
 - 지역 내 중증·응급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필수·지역의료진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논의 가속화
 - * 1조원 규모 공공정책수가 투입, 필수 의료인력 유입 및 국립대병원 정원확대 추진
 - 재정누수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비급여 진료 비용 보고제도'를 도입**('23.9월)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 지원
 - * MRI 등 과다 의료이용 항목 개선,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이상 체류조건 도입 등
 - ** 비급여 항목(565개)에 대한 가격 정보, 안전성·유효성 정보, 급여기준 정보 공개
- 탄소중립의 소부문 이행촉진 및 합리적인 화학물질·물관리체계 마련
 -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23.4월)하고, 20조원 규모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달성
 - 「도시침수방지법」 제정('23.9월),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 수립*('23.12월)을 통해 집중호우 등 일상화되는 기상이변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강화
 - * 홍수방어 기반시설 확대,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 도시침수지도 구축 등

- 「**화평법·화관법**」 개정(‘24.1월)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 합리화

* 등록기준을 당초 ‘연간 0.1톤 이상’에서 선진국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

□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취약계층 근로권의 보호**

- **노조 회계공시제도 시행***(‘23.10월)으로 노조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시정하여 부당관행 개선

* 회계공시대상 총 739개 노조 중 민주노총·한국노총 포함 675개 노조가 참여(‘23.12월)

- 취약계층 근로권의 보호를 위해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차별예방 공정대우 가이드라인**(‘23.12월) 및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23.5월) 마련

*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23.2월), 석유화학산업(‘23.9월), 자동차 업계(‘23.11월)

□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대학평가 개편***(‘23.3월) 및 **설립·운영 요건 완화****(‘23.9월), **글로벌 대학 지정**(‘23.11월)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 지원

*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폐지, 先재정지원-後성과관리 체제로 전환

**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재산) 중 ‘교지’ 요건 폐지

- ‘**유보통합**’ 추진체계 정립(‘23.12월 「정부조직법」 개정),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및 **수능 킬러문항 배제, 교권보호 강화****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23.6월),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 개설(‘23.11월)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관련규정 개정(‘23.9월)

□ **K-콘텐츠, 수산물 안전관리, 산림이용 증진 등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 **역대 최대 K-콘텐츠 펀드 조성**(4,191억원),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마련(‘23.7월) 등으로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건강한 소비환경 조성

* 불법사이트 집중단속 및 신속차단, 국제수사 공조강화, 과학수사 기반확충 등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 원칙하에 **수산물 현장점검, 검사대상 확대*** 등으로 국민불안 해소

* 검사건수 : (‘22년) 5,441건 → (‘23년) 12,012건, 검사품목 : (‘22년) 100개 → (‘23년) 166개

- 예찰 강화에 따른 **산불피해 최소화**(‘22년 24,797ha→‘23년 4,992ha), **산림 복지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민의 산림이용 편의 제고

* 휴양시설 확충·보수 147개소, 교육·치유시설 43개소, 유아숲체험원 40개소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재설계

- 다각적인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 하락하며 국가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위기감 상존

* 합계출산율 : ('20년) 0.84명 → ('21년) 0.81명 → ('22년) 0.78명

☞ 기존 인구위기 대응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평가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

□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확대 및 품질 제고

- 맞벌이 가구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공서비스 확충 한계, 민간 서비스 신뢰 부족 등으로 공급부족 심화*

*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높으나, 공급부족으로 장기간 대기 필요('23.11월 평균 27일)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민간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23.4월 발의)이 국회 계류중인 바, 조속한 입법추진

□ 늘봄학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24.2학기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 실시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기존 교원 업무부담 증가 및 교육시설 부족 등에 대한 우려 제기

☞ 전담인력과 시설 확충 등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준비 철저

* ('24년 2학기) 늘봄지원실 설치, 전담인력 배치 → ('25년)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

□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하여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신뢰성 제고

- 딥페이크·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정교하게 조작된 정보의 유통이 증대*되면서 여론 왜곡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재산을 위협

* 딥페이크 등 시정요구 성범죄 건수('23.1~11월, 6만1천여건), 유명 연예인 투자권고('23.12월)

☞ 가짜뉴스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점검·정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등 예방적 조치 노력 강화

일반행정 분야

-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범죄 및 재난·사고 대응체계 강화
- ❖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 지방시대 본격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경주
- ❖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주요 정책성과

□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안전 보호

-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민생 침해범죄(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디지털성범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 노력
 - *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 제한(한국형 제시카법) 및 성충동 약물 치료 의무화 추진 등
 - **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대비 30% 감소 ▲전세사기범 962명 기소 ▲디지털 성범죄 구속률 증가(전년 대비 1.6%↑)
-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3.11월) 수립·추진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 * 불법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마약류 사범 총 17,817명 검거(전년 대비 43.8%↑), 2,650명 구속(전년 대비 54.0%↑))
 - ** 건설현장 실태점검(23.1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월), 불법하도급 단속(23.5~8월)

□ 재난·사고 대응 시스템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 다중운집 인파관리 강화*,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취약시설(2.9만개소) 집중점검 등으로 재난안전 예방·대응역량 강화
 - *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주체가 불명확한 축제의 지자체 책임 강화(23.9월 「재난안전법」 개정)
 - **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 1단계 가동(23.3월),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시범사업(23.10월)
- 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소방헬기 통합출동** 및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 확대(22년 13,472→'23년 22,454개)로 현장 대응력 제고
 - * '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약 6%대 감소 전망
 - ** 지역구분 없이 최단거리 헬기 출동(23.7~24.6월 대전·충남·충북·전북 4개 지역 시범운영중)

□ **정부 운영의 효율성 및 청렴도 제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합리화**

- 통합활용정원을 통한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 성과중심 평가·보상체계 **확충*** 등으로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리 강화****

* 경력평정 반영 비율 축소, 동료평가 시행 확대('23년 4개 중앙부처 시범 운영 → '24년 전 부처 확대)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신설('23.1월), 공직유관단체 전수조사(867건 적발) 등

- 보훈대상별 **보상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훈심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 제공

* 보훈급여금 인상('22~'24년 연속 5%대), 보훈대상자 유형·지역별 보상수준 차이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23~'25년) 등

□ **지방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경주**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23.11월)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노력 경주

*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조성, 세제감면 및 규제 특례 등 혜택 제공

- **지방보조금 관리방안***, **우발채무 분류체계 세분화**('23.5월) 등을 통해 지방채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부정수급 예방 및 제재강화 등 「지방보조금법」 개정('23.4월), 부정수급 적발사업 폐지, 성과평가 미흡사업 50% 삭감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 수립('23.8월)

□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정보 활용기반 강화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지원**

- **데이터분석**을 통한 사회현안 해결*, **과급력이 큰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 데이터로 구축·개방****하여 민간의 창의적 활용 및 서비스개발 촉진

*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23.2월), 경찰수사에 활용('23.10월)

** '23년 복지·교육·교통·취업·건강·안전 등 12개 영역 30개 분야 데이터 개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월)을 통해 **마이데이터 본격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명정보 활용 확산****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가명정보 결합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자기활용 목적의 데이터 자체 결합 허용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근본적인 행정전산망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 '정부24' 등 행정전산망 장애로 국민 불편이 발생되고,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저하 우려

☞ 행정전산망의 규모·복잡성 증가로 작은 결함에도 큰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안정성·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 대책 마련·추진

□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 정부의 치안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일상 속 국민불안 지속

*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등

☞ 새로운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관련법상 처벌규정 강화

□ 현장 상황을 고려한 법령 해석·적용 등으로 국민혼란 방지

- 일선 학교 현장 체험학습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해 유관기관간 경직적인 법령 해석·적용으로 교육현장 혼란 사례 발생*

*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체험학습 취소, 위약금 발생 등 교육 현장 혼란 발생 이후 전세버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23.10월)

☞ 1차적인 법령 해석·적용은 현장상황에 맞게 최대한 유연하게 하고, 법령이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 신속하게 개정하여 국민혼란 방지

□ 응급환자 생명보호를 위한 긴급이송시스템 개선

- 응급환자 이송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 지속*

* 17세 추락 환자 사망('23.3월), 70대 교통사고 환자 사망('23.5월) 등

☞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중증도 분류체계 일원화*를 통해 위급 정도에 따른 분산이송 강화 등 중증·응급환자 생명 보호방안 강구

* '24.2월부터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 전국 확대·시행

외교안보 분야

- ❖ 양·다자 외교,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 ❖ 능동적 억제 및 대응역량 보강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
- ❖ 우수한 방산수출 실적 달성 및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기반 구축

주요 정책성과

□ 양자·다자외교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국가위상 강화

- 대통령 국민 방미('23.4월) 계기 한미동맹을 경제·첨단기술 분야까지 확장*하고,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조성
 - * 안보, 경제안보,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분야에 대해 역대 최다 결과문서 채택
 - ** 대통령 방일('23.3월) 및 기시다 총리 답방('23.5월)을 포함, 7회 한일정상회담 개최
- 유럽*·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협력 파트너인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로 우리의 외교지평 확대
 - *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계기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23.7월), 한-영 양자관계 격상('23.11월)
 - ** 아프리카 10개국 정상회담('23.9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최초 개최('23.5월),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 최초 참석('23.7월)
- 11년만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4-'25년) 진출('23.6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23.3월) 등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국제공조 강화 및 대응역량 확충

- '워싱턴 선언*' 채택('23.4월),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23.8월) 계기 한·미·일 안보협력 구축
 - * 북핵 공격시 한미 정상간 즉각 협의,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압도적 대응 약속
 - **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를 위한 3국간 협력원칙과 구체적 실행방안 발표
- 첨단전력 확충*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북한 무인기 도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창설('23.9월)
 - * 독자적인 대북감시가 가능한 군 정찰위성 최초 발사('23.12월), F-35A 20대 추가구매 계약 체결('23.12월)

- **우수한 방산수출 실적 및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국방혁신 적극 추진**
 - **방산수출 다변화***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별 거점국가 설정**** 등 맞춤형 수출전략 실시로 **13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 달성**
 - * 수출 대상국/무기체계 : ('22년) 4개국/6종 → ('23년) 12개국/12종
 - ** (유럽) 폴란드 방산협력관 파견('23.1월) 및 방산협력단 설치 추진('24년~)
(중동) 한-UAE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MOU 체결('23.1월)을 통해 방산 네트워킹 확대
 - 「**방위사업법**」 개정('23.5월)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 Fast-Track 절차***를 신설하여 **첨단기술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
 - * 성능이 입증된 기술에 대한 소요검증 등 절차를 축소하여 무기체계 획득 소요기간을 당초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

- **성과 중심의 세일즈 외교 강화 및 재외동포 정책추진 기반 구축**
 - **순방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 계기** 등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수주 달성 적극 지원*
 - *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약 6.4조원) 수주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 설비사업 수주(약 2,600억원) ▲폴란드 방산수출 및 고속철도 설계사업 수주(약 432억원) 등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23.5월) 및 '**재외동포청**' 설립('23.6월) 등을 통해 정책기조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
 - * ▲(성격) 시혜성 지원 → 호혜적 동반성장 ▲(방식) 정책수립 및 사업이행 일원화
▲(대상) 국내거주 동포도 정책대상에 포함

- **북한 인권 개선노력 강화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자립 적극 지원**
 - '**북한인권보고서**' 발간('23.3월), '**북한인권증진 종합계획***' 수립('23.12월)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강화, 인권실태 국내외 공감대 확산, 국제사회 협력 강화 등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조기 파악** 하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가동('24.1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정착지원금 인상('23년 900 → '24년 1,000만원), 새출발장려금 신설(최대 3년, 연간 200만원 지원) 등
 - ** 위기징후지표를 활용한 위기분석, 유관기관 가용자원 통합조회 및 협업 지원 기능 구축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소통 강화

- 리·북 정상회담('23.9월) 이후 무기거래·군사협력 등 양국 관계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반도 안정 및 국제평화 저해 우려** 제기

☞ **중·러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리·북 협력이 안보리 결의 준수하에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견인**

□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예상되며 **미래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한 **증장기 대책 마련** 긴급

* 병역자원 감소로 '24년부터 육군 전방 1사단, 9사단, 25사단 신병교육대대 해체

☞ **자동화된 첨단무기 전력화 등 병력감소에 대응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미래 안보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

□ 차질없는 방산 수출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방산수출 증가로 **국내 수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도 필요하나, 관련법상 수출입은행 지원한도 제한***으로 **계약체결 차질 등 우려**

*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상 특정 대출자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되어 있어, 폴란드 2차 방산수주 등 일부 계약관련 추가 금융지원 차질 우려

☞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노력을 강화** 하고, 차질없는 계약체결을 위한 **외교적 지원노력 병행**

□ 통일 관련 국민인식 제고 노력 강화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약화*** 우려

* 청소년 '통일 불필요' 인식도(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 : ('20년) 24.2 → ('21년) 25.0 → ('22년) 31.7

☞ 북한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을 일관되게 추진, 정부의 통일비전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안보 현장교육도 확대**

2. 규제혁신 (20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기반 및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평가대상

- 34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관명
장관급 (20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14개)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원안위

* 등록규제 여부, 업무의 대국민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 선정

□ 평가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성·정량평가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별도 구성

* 정성평가 : 규제혁신 노력·효과·만족도 등 / 정량평가 : 규제혁신 실적치, 달성률 등

**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민간전문가 포함 17명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핵심분야 규제개선 (60)	중점과제 개선 (42)	• 핵심규제 개선	27
		• 신산업 규제정비	15
	건의과제 개선 (18)	• 규제개혁신문고 과제 개선	10
		• 현장규제애로 해소	8
규제 품질관리 (25)		• 규제비용감축 성과	12
		• 재검토키한 도래 규제 개선	8
		•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5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15)		• 국민소통(홍보) 실적	5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10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B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보건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조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해경청
C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농진청, 질병청, 원안위

'23년도 주요 성과

- (핵심규제 개선)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심판제 등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 정부 출범 후 1,7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약 101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
 - 정부·경제단체 합동으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운영하여 입지·환경·노동 등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 선정,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해소
 - * 산단입지, 화학물질,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순환경제, 외국인 고용, 산업안전 등 6개 킬러규제 개선방안 마련·발표('23.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 규제심판,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복잡한 갈등으로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적극 혁파
 - * 신규계좌 거래한도 상향(규제심판),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규제혁신추진단) 등
 - 민·관 합동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등 체감도 높은 민생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
 - * 민생규제 혁파방안 167건 발표('23.11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신산업 규제혁신) '19년 최초 도입 이후 총 1,139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 승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보완 실시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완료('24.1월 시행), 모빌리티('23.10월), 순환경제('24.1월)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규 도입 등을 통해 성과 확산 도모
 - * 규제특례 심의기한 신설(90일), 부결후 재심의 제도 마련, 부가조건 변경신청제 도입 등
 - 총리주재 현장간담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 규제애로 적극 해소
- (규제 품질관리) 규제비용 감축제 운영, 사후규제영향분석 시범도입 등 규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 신설·강화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하는 규제비용감축제를 적극 운영하여 감축률 211% 달성
 - 기존규제의 효과성과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 영향분석을 도입함으로써 과학적·분석적인 심사역량 제고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 노력 필요
- 규제혁신 성과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입법화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노력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핵심규제 개선

주요 성과

-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 기업투자의 걸림돌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7.5), 산단입지·접경지역 등 25개 분야를 선정하여 범정부적인 개선 추진
 - 두 차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신시장 창출·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산단·환경·고용 등 6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 * (3차, '23.3월)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등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경제형별규정 합리화 등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 (4차, '23.8월) ①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②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③ 환경영향 평가 규제, ④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⑤ 외국인 고용규제, ⑥ 산업안전 규제
 - 국민 불편·부담규제 등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23.11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사례 (복지부)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중기부) 유효기간 만료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등
 -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 반대, 관계부처 간 이견 등으로 장기간 미해결된 규제(9건) 개선
사례 (금융위) 신규계좌 거래한도 상향, (기재·복지부)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 등
 -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덩어리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총리주재 회의 총 17회), 총 19개 과제(개별규제 총 124건) 개선방안 마련·발표
사례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개선(77건)으로 국민·기업의 부담 경감
 -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통합·축소(26건), ▲조사 방식 개선(29건), ▲행정조사 법정주의 확립(16건), ▲과도한 제재 완화(6건) 등 행정조사 정비 실시
- 대국민 이벤트 등을 통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참여·관심 제고
 - 황당규제 공모전 민생 규제혁신 BEST-5 국민투표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 적극 활용
사례 (경찰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편의 제고, (복지부) 아동급식카드 봉투구매 허용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제혁신 과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 필요

신산업 규제혁신

주요 성과

-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 추진
 - 규제샌드박스 과제 승인 누적 1,139건, 규제개선 완료 265건
 - ▶ 사례 [과제승인] 일반의약품 스마트화상판매기(ict융합), 예금상품 비교 플랫폼(혁신금융)
[규제개선] 실내외 자율주행 무인순찰로봇(산업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스마트도시)
 - 23조 1,827억원 투자유치, 9,116억원 매출증가, 1만 8,289명 고용창출 등 경제적 성과 달성
 - ICT·산업융합 등 기존 6개 분야에 모빌리티, 순환경제 분야 추가 확대
 - * 모빌리티('23.10월 시행), 순환경제('24.1월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확보
 - 조속한 실증개시와 법령정비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완료('23.7월)
 - * ①접수후 특례심의위 상정기한(90일) 설정 ②부결과제에 대한 재심의(60일) 신청 ③부가조건 변경 신청 ④법령 정비계획 수립·통보 의무(60일) 설정 등
 -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샌드박스 관련 6개 법률 일괄개정안 발의('23.7월)
 - * △동일·유사과제 신속처리(15일 이내 부처검토), △적극행정 면책 및 포상 규정 마련
- 지속적인 신산업 기업 애로 청취와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이 직면한 규제애로 해소
 - *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회로 5대 신산업 분야(ict융합, 무인이동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기업의 규제 애로 청취, 규제 개선방안 마련·권고
 - ▶ 사례 (산업부) 태양광발전 모듈 설치 방향 제한 완화, (과기정통부) SW 품질인증 재인증 부담 완화 등
 - 총리 주재 기업·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현장 소통 강화 및 규제개선 추진
 - ▶ 사례 (산업부) 수소충전소 이용요건 완화, (산업부) 카스토퍼형 전기차충전기 허용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4년이 경과함에 따라,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에 대한 법령정비 이행 노력 강화 필요

규제 품질관리

주요 성과

- 규제비용 감축제 적극 운영을 통한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 경감
 - 규제 완화 및 신설·강화 억제를 통해 766억 원의 규제순비용 감축, 규제비용 감축률 211% 달성
 - 사례 (산업부)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시 감리원 입회의무 폐지(203억원 감축), (공정위) 8개 분기 공시항목을 연 1회로 통합 조정(11.9억원 감축) 등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4.1월 시행)을 통해 신설·강화 규제 대상 영향 분석 시 규제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기존규제 폐지·완화 노력 강화
- 국민·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 다각화
 - 폭넓은 국민·경제단체(경총, 중기중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5건 중 109건 폐지·개선(폐지 3건, 개선 106건)
 - *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율 : ('21년) 21.0% → ('22년) 19.1% → ('23년) 29.7%
 - 사례 (금융위) 둘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상품 취급을 금지한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문체부) 골프장 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폐지 등
- 사전규제영향분석 내실화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심사 고도화
 - 규제비용 100억원 이하더라도 경제·사회적 영향,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중요규제로 판단, 심층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사전 차단*
 - * ▲중요규제 비율 : ('22년) 8.7% → ('23년) 13.1% ▲개선권고율 : ('22년) 76.1% → ('23년) 81.3%
- 사후규제영향분석 시범 도입을 통한 과학적·분석적 심사 역량 제고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20건을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 목적 달성 수준을 확인하고 과학 기반의 실효적 규제대안 마련
 - 사례 (경찰청) 경비업 허가시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 가능한 교육장' 기준 폐지 (과기정통부) 先조성, 後지정 방식에서 先지정, 後조성으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요건 개선
-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규제혁신 가속화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4.1월 시행)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 추진으로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 방안 규정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적정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규제영향평가 품질 제고

3. 정부혁신 (10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
 - 포상·홍보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추진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환류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정부혁신의 확산 및 선순환 유도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건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행안부 정부혁신평가단* 구성·운영 및 일반 국민** 체감도 평가
 - * 민간전문가(18명) : 학계(12명), 민간 전문가(3명), 연구원(3명) 등
 - ** '소통24'를 통해 각 부처 정책에 대한 국민선호도 심사 참여('23.11~12월 약 2만명)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배점
혁신역량(20)		•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정성	10
		• 기관의 정부혁신 활동 및 성과확산 노력	정성/정량	10
혁신 성과 (70)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20)	• 국민소통 정책화 성과	정성	5
		• 공공데이터 개방	정량	5
		• 민관협력 활성화	정성/정량	10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20)	•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정성/정량	10
		• 유니버설디자인 등 편의성 개선	정성	10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30)	•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정량	10
•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정성	20	
국민체감도(10)		• 국민 체감도 평가	정성	10
가.감점		• 산하 공공기관 혁신	정성	±15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복청, 해경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금융위	방사청, 질병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정부혁신 평가주관기관(행안부)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23년도 주요 성과

❖ 기관장의 정부혁신 의지와 철학을 바탕으로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기관 고유업무와 연계한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구성원에게 혁신 동력을 내재화하고,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기여

* (농식품부) 전직원 대상 관행타파 등 정부혁신 내재화 강조

○ (선제적 정부) 국민의견을 정책에 폭넓게 반영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확대

* (국토부) 항공권 예매 시 KTX 승차권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항공-철도 연계발권서비스' 시행
(중기부) 민간 홈쇼핑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 (서비스 정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新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교육부) 교육 관련 증명서 발급의 온라인화 및 정부24와의 연계 등
(행안부) 7개 국가신분증 관련 표준 정비방안 마련('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 (에자일 정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일하는 방식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세대간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공직 내부 역량 강화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자동화 등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한 효율화
(산림청) 혁신어벤저스와 함께 전 부서장(54명)이 '조직문화 혁신 약속 캠페인' 실시
(해경청) 지휘관별 리더십 철학 공표, 신입직원 멘토링, 찾아가는 현장소통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 의견 수렴 시 실질적인 참여 기회 확대, 정책 고객 집단별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화 등 보완 필요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적용 이후 효과성 분석이나 지속적인 활용 체계 방안 마련 등 개선

4 분야별 평가결과

소통 · 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주요 성과

□ 국민 소통·참여를 통한 다양한 정책 성과 도출

- 폭 넓은 국민 참여를 위해 부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 (행안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2030자문단, 정책소통 포럼 등 다양한 채널 운영 (산림청) 산림분야 국민정책디자인단, 청년규제발굴단, 산림복지관계자 등 활용
- 민원·제안 등을 통해 발굴된 국민의견을 정책화하거나 제도개선 추진
* (농식품부) 참깨 수입 고액 체납사건 근절방안(우수제안 정책화), 동물관련 시설물 소독 규정 보완(소통24 혁신제안특 발굴), 반려동물 전담부서 설치(소통포럼 의견)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서비스의 연계·공유 활성화

- 원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진위확인서비스 등 개방 유형·방식 다양화
* (복지부)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암환자 전주기 데이터(198만명 규모) 개방, (경찰청) 마약예방·보이스피싱 예방영상 등 제공, (교육부) 국제교육원 수료자 증명서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등
- 국민 수요와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의 신규 서비스 창출
* (산업부) 고수요 과학기술 R&D 데이터 개방(사이버보안 24건, 항공우주전파 93건, AI/SW 40건 등) (기상청) 기상청-도로공사의 비정형 데이터를 융합하여 도로기상 안개예측자료, 도로살얼음 신규 데이터 발굴·생산 및 민간 내비게이션에 연계 제공

□ 민간 협력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민간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토부) 항공권 예매 시 KTX 승차권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항공·철도 연계발권서비스 시행(23.6월~)
- 우수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산업 창출 및 상생협력 지원
* (중기부) 민간 홈쇼핑과 협력하여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소상공인의 자금판매대금 정산일 이전 조기 현금화 가능(연간 9천억 규모)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견의 대표성 제고, 정책고객 집단별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화 등 보완 필요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주요 성과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및 서비스 혁신

-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알림·고지의 **디지털화** 등 서비스 체계의 **효율성 제고**
 - * (식약처) 수작업으로 하던 수입식품 신고서류 검토를 자동화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 도입
→ (처리기간) 평균 1일 → 5분 / (물류비용) 연간 약 60~200억원 절감
 - (국세청)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서비스' 전 과정 자동화로 국민편의 제고
 - (농진청) 특허 기술거래 계약 시 최종 계약자 날인을 e-전자계약시스템으로 디지털화
→ 민원 소요시간 90% 단축(최대 21일 → 2일)
-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모바일·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확대**
 - * (교육부) 교육 관련 증명서 발급의 온라인화 및 정부24와의 연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현장 발급 개선, 재외한국학교 및 영재학교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등
 -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과세물품 신고 시 앱을 통해 전자납부고지서로 세금 납부
(종이 납부고지서 발급 약 10분 → 모바일 납부고지서 발급 약 3분)

□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

- 어르신·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 * (과기정통부) 노인, 장애인도 편리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키오스크 UI 개발·보급 등
 - (국세청)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신청제도' 신설(107만여 명 자동신청 동의)
- 중장년·청년·외국인 등 **신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행안부) 7개 국가신분증 관련 표준 정비방안을 마련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들을 위한 공공표지판 표현 정비 및 8개 국어 번역 등
 - (복지부) 중장년(돌봄, 가사서비스), 가족돌봄청년(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령인, 장애인 등 공공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과 다양한 정책고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 지속 개선·확대 필요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주요 성과

□ 데이터 기반의 업무 효율화 및 과학적 행정 구현

- 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는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활용 증가**
 - *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지역별 주민대피시설 등 171종 지정등록 데이터, 자유등록 데이터 53종 등 총 224종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 (해수부) 운반선 항적정보, 해양관측소 정보 등 234종 지정등록 데이터, 자유등록 데이터 8종 등 242종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 데이터 발굴·분석·활용 및 정책 반영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 해결**
 - * (관세청) 북미 지역에서 출발하는 우범 여행자 예측을 통한 마약 범죄 적발에 활용
 - (소방청) 119 빅데이터 활용 뇌졸중 예측 모델 개발, 뱀몰림 사고 빅데이터 분석 등

□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시간 단축, 기관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
 - * (복지부) 자료 없는 회의 확대(상황점검회의 자료 생산횟수 : '21년 51회 → '22년 48회 → '23년 0회)
 - (국토부) 지자체 소관 도로대장 디지털화 시범사업 협업(국토부-광주광역시-경기도-예천시)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자동화 등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한 효율화
- **세대간 소통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 (산림청) 혁신어벤저스와 함께 전 부서장(54명)이 '조직문화 혁신 약속 캠페인' 실시
 - (해경청) 지휘관별 리더십 철학 공표, 신입직원 멘토링, 찾아가는 현장소통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적용 이후 효과성 분석** 또는 **지속적인 활용 체계 마련** 방안 필요

4. 정책소통 (20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성과 체감 확산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관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건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각 기관별 정책소통 활동,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정량평가는 각 지표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관별 실적을 산출·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단'을 구성·운영(11개조, 각 7명)하여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성과 자료를 객관적·전문적 평가
- 체감도는 소통만족도와 온라인 체감도로 구분하여 정량·정성 평가
 - 소통만족도는 주요정책 평가와 병행하여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소통 노력 및 성과에 대해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평가(국조실 주관)
 - 온라인 체감도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통해 국정 현안 및 부처 정책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분석 평가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소통 활동	부처협업 활동	• 대변인·온라인대변인·외신대변인 협업	15
	보유자원 활용	• 보유매체 활용, 정부영상 공유 및 확산	
소통 성과	주요정책 소통성과	•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 소통활동 우수사례	70
	현안대응 성과	• 일일보도 대응 성과, 온라인현안 대응 성과	
	온라인 소통성과	•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양방향 소통,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제작성과	
	기관장 소통성과	•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 이슈관리	
	외신 소통성과	• 외신소통 실적 및 우수사례	
체감도	소통만족도 온라인 체감도	• 주요정책 소통 관련 국민만족도 조사,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15
가감점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 보도자료, 보고서 점검	±2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새만금청, 해경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조달청, 통계청, 행복청, 원안위

※ 정책소통 평가주관기관(문체부)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23년도 주요 성과

- 정부 2년차, 전략적 홍보기획과 현장중심 소통으로 주요정책 성과 확산
 - 정책의 브랜드화 등 마케팅적 접근으로 소통효과 제고 및 성과 확산
 - * (농식품부) 히트 정책인 '천원의 아침밥' 발굴·홍보로 MZ세대 타겟 긍정 이슈화 확산
(행안부) '고향사랑 기부제' 국민참여 홍보강화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정책 대상 전략적 홍보기획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
 - * (복지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관련 기획기사로 민생정책 인지도 제고
(기상청) '도로 살얼음 내비게이션, 눈 무게 예보' 등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정책 홍보에 흥미롭게 연계, 기상재난 예방
 - 기관장 언론활동 및 정책현장 방문 강화로 국민의 정책 이해 증진
 - * (고용부) 공정채용 우수기관 방문 등 노동개혁 관련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 모습 부각
(산림청) 산불, 산사태 대비 정책현장 점검의 정례화(월평균 28회)로 산림재난 예방
 - 오보 및 이슈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정책 신뢰 확보
 - * (해수부) 방사능 검사 관련 과학적·신속 대응으로 국민불안 해소 및 수산물 소비 안정화
(식약처) 비위생 칭다오 맥주 등 이슈에 대해 신속 대응하여 식품위생 정책 신뢰성 확보
- 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소통으로 정책 수용도 제고
 - 국민여론수렴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 온라인콘텐츠 완성도 제고 및 소통효과 확대
 - * (농식품부) 반려동물 관련 빅데이터 여론분석 결과 등을 활용,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전개
(산림청) 빅데이터 여론 및 이슈 분석결과 활용 'I LOVE WOOD' 캠페인 기획·실행
 - 정책수요자의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채널 다변화 및 공감형 콘텐츠 제작 확산으로 대국민 정책 수용도 제고
 -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국민 참여형 유튜브 방영으로 정책 공감대 확산
(경찰청) '마약과의 전쟁' 콘텐츠를 라이브 방송(플라이브)을 통해 국민 관심 유도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수 부처 연관 정책의 관계부처 간 협업홍보 강화 및 전략적 홍보 기획으로 정책소통 효과 시너지 창출 필요
- 정책 홍보 목적에 맞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 제고 필요

전략적 홍보기획과 현장중심 소통으로 주요정책 성과 확산

주요 성과

- 주요정책 핵심과제의 전략 홍보로 정책인지도 제고 및 성과 확산
 - 정책의 브랜드화 등 마케팅적 접근으로 소통효과 제고 및 성과 확산
 - * (행안부) '고향사랑 기부제' 국민참여 홍보강화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연예인 동참 긍정비율 85%, 언론·방송·온라인 725건 보도 등)
 - (농식품부) 히트 정책인 '천원의 아침밥' 발굴·홍보로 MZ세대 타깃 긍정 이슈화 확산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관련 국민 눈높이 홍보로 정책 이해도 제고
 - 주요정책 대상 전략적 홍보기획으로 국민 인지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 (복지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관련 기획기사로 민생정책 인지도 제고
 - (농진청) 가루쌀, 스마트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 기획홍보(21건)로 농업정책 공감대 확산
 - (기상청) '도로 살얼음 내비게이션, 눈 무게 예보' 등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정책홍보에 흥미롭게 연계, 기상재난 예방 및 부처 부정여론 감소(33%→28%, 5%↓)
- 정책수요자 및 현장 중심 소통활동 강화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 기관장 언론활동 및 정책현장 방문 강화로 대국민 정책이해도 증진
 - * (행안부) 지방소멸 위기대응 우수지자체를 현장방문, 지역살리기 정책성과 긍정정보도 견인
 - (고용부) 공정채용 우수기관 방문 등 노동개혁 관련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 모습 부각
 - (산림청) 산불, 산사태 대비 정책현장 점검의 정례화(월평균 28회)로 산림재난 예방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신속대응 및 영상·카드뉴스 제작·설명 등 적극적 후속 대응으로 오보·왜곡 보도 확산 방지 및 정책신뢰 확보
 - * (해수부) 방사능 검사 관련 과학적 신속대응으로 국민불안 해소 및 수산물 소비 안정화
(방류 전후 9주간 비교 시 대형마트 12.4%↑, 노량진 시장 내 식당 매출 88.2%↑)
 - (고용부) 노사법치주의 관련 카드뉴스 제작과 기관장 적극 홍보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식약처) 비위생 칭다오 맥주 등 이슈에 대해 신속 대응하여 식품위생 정책 신뢰성 확보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수 부처 연관 정책의 관계부처 간 협업홍보 강화 및 전략적 홍보 기획으로 정책소통 효과 시너지 창출 필요

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소통으로 정책 수용도 제고

주요 성과

- 정책여론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데이터 기반 온라인 소통활동 확대
 - 부처의 중점 정책과제 및 현안사항 위주의 핵심키워드*를 선정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 인지도 제고
 - * (농식품부) 반려동물, 언급량 639천건 / (중기부) 벤처기업, 언급량 555천건
(경찰청) 전세사기, 언급량 447천건 / (기상청) 태풍, 언급량 1,119천건
 -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온라인콘텐츠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전략적 홍보활동 추진
 - * (농식품부) 반려동물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조사, 빅데이터 여론분석 결과 등을 활용, 유기·유실 동물 입양 캠페인 전개
(산림청) 빅데이터 여론 및 이슈분석 결과 활용 'I LOVE WOOD' 캠페인 기획·실행
-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공감형 콘텐츠 제작으로 정책수용도 제고
 - 정책수요자의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세분화된 디지털 채널운영
 - * (해수부)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연중 캠페인'을 유튜브, 페이스북을 활용 지속홍보
(관세청) '해외직구 관세납부 기준'을 인스타그램 웹툰 형식으로 쉽게 설명
(기상청) '기후변화 3초, 커피의 호소' 기상변화를 유튜브 쇼츠 형식으로 흥미유발
 - 국민 공감형 콘텐츠 제작·활용으로 대국민 정책 수용도 제고
 -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담당 공무원과 일반인이 유튜브에 출연하여 쉽고 흥미롭게 설명, 이해 관계자 정책 공감대 확산
(경찰청) '마약과의 전쟁' 콘텐츠를 라이브 방송(플라이브)을 통해 국민 관심 유도
(농진청) '배! 효능부터 구매팁....' 농업 전문가가 유튜브에 출연하여 유용한 정보제공 등 농업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긍정평가 확산

개선·보완 필요사항

- 빅데이터 언급량, 호감도 등 단순분석을 넘어 정책홍보 목적에 맞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역량 제고 필요

5. 적극행정 (가점 3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별 적극행정 개선 노력 및 그로 인한 파급효과·성과 등을 점검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개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정량평가) 기관의 최근 3년 실적을 기준으로 보통 등급 부여, 초과 달성시 달성 정도에 따라 상위점수 부여
 - (정성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적극행정 추진성과' 항목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별도 평가하여 합산
 - * 적극행정 및 정부 업무에 대한 이해와 평가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 10명
- '적극행정 체감도'의 경우 별도 용역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배점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45)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계획의 적극성, 창의성 • 제도개선 노력도 	정성	9
	기관장 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활동 실적 •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의지 	정량 /정성	9
	제도 활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실적 • 사전컨설팅 운영실적 	정량 /정성	11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 •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실적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실적 	정량 /정성	7
	교육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교육 실적 	정량 /정성	4
	홍보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홍보 노력도 및 홍보 실적 	정량 /정성	5
적극행정 추진성과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성과 제출 실적 	정량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성과 창출 	정량 /정성	35
적극행정 체감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적극행정 체감도 	정량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적극행정 체감도 	정량	5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C	통일부, 산업부, 여가부, 방통위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원안위

※ 적극행정 평가주관기관(인사처)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23년도 주요 성과

-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일상화·내재화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추진지침 수립·배포('23.4월), 전부처 확대 시행
 -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행기관 : '22년 6개 기관(시범운영) → '23년 37개 기관
-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의사결정 지원 활동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안 적극 발굴·추진
- 국민들이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방식 도입 및 고객중심 교육지원 확대를 통해 적극행정 공감도·이해도 제고
 - * 대국민 캐릭터 공모전('23.5~9월), KTX 열차내 홍보영상 송출('23.7~8월), 우수사례 웹툰 게시('23.2~4월), 시뮬레이션 게임방식 e-러닝 개발 등
- 적극적으로 기관 간 및 민·관 협업하고 다양한 수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여 적극행정 사례 창출
 - * (과기부) 지방자치단체(세종, 서울)·환경부와 협력하여 폐의약품 수거제도 종합 대책 마련 (농식품부) 신속한 전용예산 확보를 통해 대학생 233만 명에게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 실시

< 지표로 보는 적극행정 >

▶ (국민체감도)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상승

* ('19년) 61.6% → ('20년) 62.2% → ('21년) 64.0% → ('22년) 63.7% → ('23년) 64.5%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대상업무 발굴의 체계성 강화 및 적극행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분석 강화 필요
- 적극행정 추진 시 실질적인 논의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부처별 적극행정위원회 등 관련 지원제도 적극 활용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국민체감 적극행정 노력 다각화

주요 성과

- 성과·보상 연계를 통한 적극행정 실천의지 제고 및 기관별 이행 노력 강화
 - 일상적 업무과정에서의 적극행정을 **즉각·상시적으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전 부처 확대 실시를 통해 **적극행정 일상화·내재화** 도모
 -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추진지침」 수립·배포('23.4월), '22년 6개 기관 → '23년 37개 기관
 - 전년도 보완사항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 근거하여 적극행정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적극행정 운영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 위해 **제도개선 노력**
 - *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개정 및 전파, 내부점검 협의체 운영 통한 국민체감 중점과제 선정·관리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현안해결을 위한 **제도 활용**
 - **적극행정 지원 제도 활용**을 통해 국민의 삶과 안전에 기여
 - * (해수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국내 포털사이트와 적극 협의 거쳐 해양방사능 안전도 신호등 표출
 - * (국세청) 기존 국민이 직접 신청했던 증부세 환급신청 방식을 '사전컨설팅' 활용 통해 국세청이 직권 환급할 수 있도록 해 고령 납세자 등 국민 불편 해소 및 권익보호에 기여
- 적극행정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방식 도입 및 체감도 제고**
 - 기관별 업무와 관련된 **교육 구성 체계화** 및 **홍보방식 다변화**로 공직사회 내·외부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도·이해도 제고**
 - * (국세청) 신규직원 맞춤형 메타버스 교육,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재로 한 게임기반 사례교육 등 체험형 심화교육 운영
 - * (해경청) 기관장 챌린지 직접 참여로 적극행정 사례 릴레이 홍보, 기관 마스코트 활용 하여 지역별행사에서 적극행정 홍보 및 이벤트 진행
 -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 *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국민체감도 상승(직전조사 대비) : '19년 61.6% → '20년 62.2% → '21년 64.0% → '22년 63.7% → '23년 64.5%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극행정 추진에 적합한 기관별 **대상업무 적극 발굴** 및 적극행정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강화** 필요

행정수요 해결하는 성과 창출

주요 성과

-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
 -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한 오래된 규제를 최근 환경 변화에 맞게 적극 해석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
 - * (환경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고시 개정 전 매각 외 화재진압 훈련에의 활용, 재활용 연구기관 제공 등 선제적 허용
 - * (해수부) 위험물의 선박 반입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개선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에어컨·냉장고 설치 불편을 해소

- **적극적인 기관 간 및 민·관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성과 창출**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
 - * (해경청) 연안 안전사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서프구조대를 발족하여 총 79명 구조
 - * (소방청) 종전 광역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소방헬기를 국가 통합출동 체계로 개편하여 4개 시·도(대전, 충남, 충북, 전북) 시범운영 및 출동시간 평균 15분 단축
 - * (과기부) 폐의약품 수거제도 개선을 위해 지자체(세종, 서울) 및 환경부와 협력하여 배출부터 회수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국민 안전 제고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

-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창의적 방안 마련**
 -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표뿐 아니라 사회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
 - * (과기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의심가구에 집배원이 복지등기를 배달하며 생활 실태를 파악,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등기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 (국토부) 중증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전국 통일 운영기준 마련
 - * (농식품부) 쌀 소비 감소와 대학생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전용예산 확보(2,501백만 원)를 통해 233만 명에게 '천원의 아침밥' 제공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처별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실질적 논의와 방안 마련을 독려할 필요

IV. 후속조치 계획

□ 평가결과 공개

- 공개범위 : ▲ 부문별·기관종합 각 부처 '등급' (A·B·C)
▲ 주요정책 등 부문별 주요실적,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개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 포상

- '기관종합 및 부문별 A' 등급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은 부문간 배점 비중 차이를 고려하여 배분
 - * 배점 비중 : 주요정책(50%), 규제혁신(20%), 정부혁신(10%), 정책소통(20%)
- 유공 포상 약 30점(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 개선·보완 필요사항 후속조치

- 평가시 지적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부처별로 개선 추진
→ 후속조치 추진결과 점검 (연말 평가 반영)